

李 대통령, 경사노위 참여 요청… “싸워도 대화는 해야”

양대노총과 오찬 간담회

한국노총 “경제주체 대타협 절실
정년연장, 하루도 늦출 수 없어”

민주노총 “노정 간 신뢰 회복 선행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으로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간담회 열고,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금 경사노위도 조직을 못하고 위원장도 선정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며 “같이 한번 논의해서 실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결론이 안 나고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정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전성과 유

연성 문제를 내놓고 한 번쯤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 토론회를 주재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적대감과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주체를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 속의 과정을 진행해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남은 하반기 동안에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의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간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 및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어제(3일)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정부와 노동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 관계 형성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K-제조업 재도약 필수… 산업정책, 완전히 재점검해야”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대책 요청
연이은 해킹사고에 보안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산업정책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위해선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하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무역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그저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가 다행히 2%대를 기록했

다고는 하는데, 농·수·축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9% 가량 많이 상승했다.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데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신다.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도 대응 또는 예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단언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노란봉투법 악영향 우려… 보완 입법 필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방문
글로벌 기업 투자 우려 청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규제로 지적돼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4일 암참 사무실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2025 암참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보고서를 한 부씩 제공했다.

김 회장은 “보고서엔 (한국의) 노동 유연성, CEO(대표이사) 리스크, 세제, 디지털 경제 규제 등 네 가지 핵심 규제 개혁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

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5 암참 기업 환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 선호도에서 아시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또 우수한 인재 풀을 갖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금 현재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도 김 회장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규제 우려에 공감했다. 장 대표는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고통하면서 그 의견을 잘 담아내서 법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이 그런 노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법이 통과됐긴 하지만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현대자동차 노조에선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울산 공장은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를 추진할 수 있을만큼 의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에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일단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야 경영상의 방어권을 기업이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필수·지역 의료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당·정·대 관계자, 협의회 가져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4일 협의회를 갖고 필수 영역과 지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골자인 필수·지역 의료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수진 복지위 여당 간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당·정·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안건으로 협의회를 가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즉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돌봄 역시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은경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 전공의 규모가 1만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또한,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간사는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두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과거부터 필수·지역 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필수·지역 의료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태홍 기자